

산지 태양광발전소 점검해도 방관

김중희 의원, 산림청 국감서 "불법행위 적발 3개월 지나도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 사후관리 안해"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



제·부안·사진)은 15일 산림청 국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김중희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험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이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불법 행위 여부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국민법제관, 수도권 집중”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중도 상당해서 교수, 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63%에 달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에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엔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세입자, 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감장에 나온 K-11 복합소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관계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감장에서 K-11 복합소총을 보이고 있다. K-11은 5.56mm 소총과 20mm 공중폭발탄을 하나로 일체화시킨 이중 총열 방식의 무기로 개발 당시 찬사를 들었으나 사격통제장치 균열 발생 등의 결함이 나타나면서 납품이 중단됐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 부진 속 농협 실적 저조 | 수익사업에만 열중

FTA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사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현황' 자료에 따



르면 농협중앙회 등 33개 회사 중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회사는 농협계미컬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원이 전부였다. 이외에 개인 명의로 낸 출연자가 40명 1,530만원이었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농·수협,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1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2017~2018 2천억원) 대비 20%에도

못미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2015년 한중FTA 비준당시 합의된 여야정합의체 합의문과 FTA민간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농·수협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농협 등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농민을 위한 지원조직인 농협마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데, 다른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

했다.

한편, 농민을 위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에 인색한 농협이 최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본분을 잊은 채 수익사업에만 열중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부문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 8,589억원으로 최고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8월까지 당기 순이익이 1조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담 주변지 지원사업비 현실화를”

도의회, 한완수·이한기 의원 공동 발의 건의안 채택 담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규정 14년간 변동 없어

담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기준 비율이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완수 의원



이한기 의원

지만 2004년 1월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완수 의원은 “해

당지역 주민들이 14년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병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담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담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안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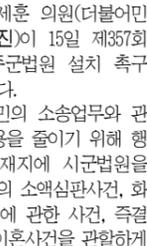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완주군법원 설치해야”

두세훈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사진)이 15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두세훈 의원



두세훈 의원

를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일제 개원하도록 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완주군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어렵게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2012년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빚졌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시군법원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뒤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 독촉 및 조정과 관련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 이혼사건을 관할하게 하는 제도이다.

두세훈 의원은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완주군에만 법원이 없어 많은 군민들께서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법률업무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 10. 12(금) - 18(목) 7일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8th NATIONAL PARA GAMES
2018. 10. 25(목) - 29(월) 5일간

주개최도시 익산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FOODPOLIS